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발행일 : 2014년 7월

발행처 : 국가안보실

전　화 : 02-730-5800

홈페이지 : www.president.go.kr

발간등록번호 : 12-1025000-000001-01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국가안보실

서 문

현재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3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동북아와 세계의 안보정세도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갈등과 분쟁의 조짐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내외의 도전을 극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통일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고자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 4대 기조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국방 · 통일 · 외교를 아우르는 국가안보 분야의 핵심 기조입니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신뢰외교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권을 수호하고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한반도에서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소상히 밝히고 이해를 높이고자 국가안보전략의 기본골격과 핵심내용을 담은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을 국내외에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안보정책에 대한 국론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튼튼한 안보와 국내외의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남북관계를 상생과 협력의 건강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신뢰와 평화 · 협력의 정신을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유라시아와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더욱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2014년 7월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목 차

Ⅰ. 국가안보전략 개관 11

1. 국정기조 13
2. 국가안보 목표 15
3. 국가안보전략 기조 17

Ⅱ. 안보환경 평가와 전망 25

1. 한반도 안보정세 27
2. 동북아 안보정세 31
3. 세계 안보정세 35

Ⅲ.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41

1. 전방위 대북 군사대비태세 완비 43
2. 북한 WMD 위협 대응능력 확보 45
3.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48
4. 범국가적 안보역량 통합 51

Ⅳ.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55

1.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57
2. 남북대화 추진과 합의이행 제도화 61
3. 인도적 문제 해결과 호혜적 교류협력 추진 63
4.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정착 68

Ⅴ. 통일시대 대비 실질적 통일 준비 ····· 73
1. 범국민적 통일 역량 강화 ····· 75
2. 통일교육 활성화 ····· 78
3. 평화통일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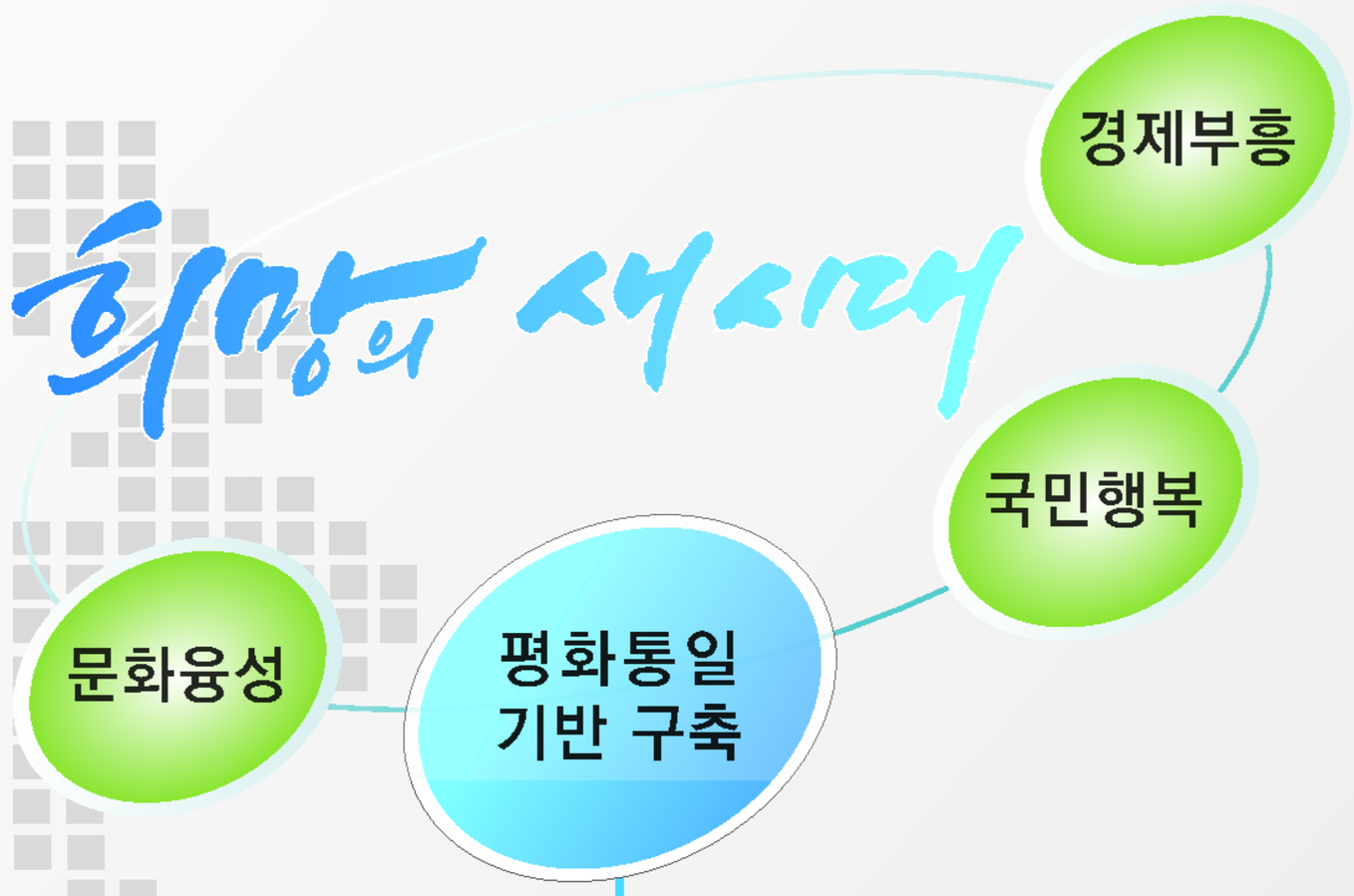
Ⅵ. 한미 전략동맹 발전과 국제적 안보협력 증진 ····· 83
1.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 85
2.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 87
3. 국제사회와의 포괄적 안보협력 증진 ····· 90

Ⅶ.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틀 마련 ····· 93
1.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적극 추진 ····· 95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협력 확대 ····· 97
3.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중견국 외교 전개 ····· 99

Ⅷ. 국가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 ····· 103
1. 경제부흥을 선도하는 경제외교 추진 ····· 105
2. 상생과 호혜의 지역별 맞춤형 외교 전개 ····· 108
3. 국민 안전 · 권익 증진과 공공외교 강화 ····· 112

* 부록 : 약어 정리 ····· 115

국가안보전략 체계



안보목표

- 영토 · 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 · 발전에 기여

안보 전략기조

-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 신뢰외교 전개

전략과제

-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통일시대 대비 실질적 통일 준비
- 한미 전략동맹 발전과 국제적 안보협력 증진
-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틀 마련
- 국가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

I

국가안보전략 개관

1. 국정기조
2. 국가안보 목표
3. 국가안보전략 기조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향하는 핵심가치로 헌법에 담아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이야말로 오늘의 번영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 걸음이었습니다.(중략) 저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과 건국은 한반도에 평화를 이루고,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룰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들을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 '13.8.15)

I. 국가안보전략 개관

1. 국정기조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곧 국가발전으로 연결되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였다. '희망의 새 시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이다. 정부는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전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삼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맞춤형 정부 3.0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정부는 4대 국정기조를 실천하여 대한민국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정립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문화를 향유하는 나라, 그리고 평화통일을 준비하며 동북아 협력을 주도하고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세계의 모범국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정부는 국방 · 통일 · 외교 분야를 아우르는 국정기조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선정하였다. 이는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지향하는 희망의 새 시대는 국가안보 영역에서는 '통일시대'의 개막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 세 가지의 국가안보 목표와 안보전략 기조를 수립하였다.

2. 국가안보 목표

정부는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 '영토 · 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그리고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 · 발전에 기여'를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하였다.

영토 · 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권과 영토를 지키고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이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 잠재적 미래 위협, 초국가적 위협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협으로부터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통일을 적극적으로 이룩해 나가고자 한다.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 · 발전에 기여

우리나라의 안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우리의 국력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평화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내외의 기대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동북아의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증진하고자 한다. 우선 역내 국가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동북아의 갈등구조를 협력의 틀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동북아에서 축적된 상생과 협력의 에너지를 확산시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번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3. 국가안보전략 기조

정부는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그리고 '신뢰외교 전개'를 국가안보전략 기조로 선정하였다. 이는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각각 국방, 통일, 외교 분야에서 실행해야 할 추진 전략이다.

신뢰는 국방과 통일, 그리고 외교 분야를 포괄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이다. 통일과 외교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간 신뢰, 정부와 국민 간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한다. 신뢰외교는 국가 간 신뢰를 형성해서 평화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익을 실현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튼튼한 안보는 국가존립의 기반이자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이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굳건한 방위역량을 갖추고자 한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도발시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응태

세를 갖춰 나갈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구비해 나가고자 한다. 충분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전력증강은 물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과 도전은 북한의 도발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테러리즘, 사이버공격, 기후변화, 전염병, 자연재해, 재난 등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은 물론 장래의 잠재적인 위협도 상정할 수 있다. 정부는 국제정세의 변화 추이를 잘 살펴서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적절히 대비하고, 초국가적 위협 징후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동맹과 우방국, 그리고 국제기구와 폭넓게 협력하면서 대외적으로 안보역량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한다. 우선 한미동맹을 미래의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공통이익을 증진하고, 역내 안보불안 해소를 위한 전략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세계 각국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협력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튼튼한 안보가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라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신뢰는 약속이행을 통해 만들어진다. 정부는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이행하면서 대화와 합의이행을 제도화하고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약속이행의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나갈 것이다.

우선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의 점진적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다.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교류협력도 적극 모색할 것이다. 남북 간에 충분한 신뢰가 쌓이고 '북한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본격적인 대북 경제협력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안보에만 매몰되어 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거나 남북관계만을 중시하고 국가안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남북대화와 국제협력 간에 균형을 이루면서 상식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남북대화도 국제규범을 중시해야만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 대북 ·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없는 정책은 동력이 약할 뿐 아니라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믿음을 주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하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이 아시아 전체의 협력과 공동발전 그리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다.

대북 · 통일정책은 발전적으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의 장점을 수용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북 · 통일정책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인정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국민통합과 민족통합을 지향한다. 정부는 북한 · 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나아가 통일은 성공적인 통합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족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다.

신뢰외교 전개

신뢰외교는 신뢰를 동력으로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다. 정부는 경제적인 상호의존 심화에도 불구하고 정치 · 안보적 갈등은 더 깊어지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도 신뢰외교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은 신뢰외교를 동북아 차원에서 구현하려는 핵심정책이다. 정부는 이 구상을 통해 기후변화, 테러, 마약, 원자력 안전, 환경, 재난구조 등 협력이 용이한 분야에서부터 다자협력의 관행을 만들고 점차 어려운 문제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자 한다. 역내 국가 간에 신뢰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평화의 질서가 정착된다면, 궁극적으로 동북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도덕적 우월성과 국력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보다 우리를 신뢰하게 만드는 원천이다. 정부는 국제적 신뢰를 자산으로 북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고, 북한의 핵포기와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신뢰외교는 국제적 통일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각국을 상대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통일이 가져올 지역적, 세계적 편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우리의 대북 · 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더 많은 신뢰를 얻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지구촌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매력적인 국가 이미지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

II

안보환경 평가와 전망

1. 한반도 안보정세

2. 동북아 안보정세

3. 세계 안보정세

Ⅱ. 안보환경 평가와 전망

1. 한반도 안보정세

북한체제의 불확실성 지속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권력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당 · 정 · 군의 최고 직위에 대한 승계작업을 마무리하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선포하는 등 1인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장성택 처형을 통해 후견체제를 청산하고 핵심요직에 측근들을 전진 배치하는 등 친정체제 확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 지도자의 권위가 확고하게 정립되지 못한 가운데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잦은 인사교체와 주민통제에 따라 사회 저변에 불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자력갱생'을 내세운 노력동원 등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여 주민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는 일시적인 식량증산과 교역증대 등으로 외견상 활기를 보이기도 했으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도부가 과시성 위락시설 건설과 핵 · 미사일 개발 등에 대규모 자원을 우선 투입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특구 개발이나 수출확대를 통한 대외경제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평양과 특권층 위주의 정책에 더욱 치중함에 따라 지역 간,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장마당을 중심으로 사경제 영역이 확산되고 외부사조 유입이 증가하여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 증대

북한은 약 120만 명의 정규군과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예비병력을 보유하는 등 인구대비 병력 보유율에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악화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핵 ·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고, 2013년 3월에는 핵무력 건설과 경제발전을 병행하겠다는 소위,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2014년에 들어서도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과 '다종화된 핵 억제력'을 거론하는 등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 ·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2012년에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 · 미사일 개발을 대내적으로 세습정권의 업적 선전과 체제 유지에 활용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대남전략 차원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정치적인 협박과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북관계 교착과 신뢰형성 가능성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하여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관계개선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협상-보상요구-재도발'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남북관계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서해상의 긴장조성과 비방 · 중상 등 거듭되는 정치 · 군사적 도발로 인해 남북한 간에는 아직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를 정치 · 경제적 실리획득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긴장조성과 평화공세를 반복함으로써 건강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장애를 조성해 왔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초한 우리 정부의 협력제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북한은 앞으로도 내부의 정치적 불안이나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직까지 권력기반이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치 ·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남북관계의 불신과 교착상태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북한이 핵포기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관계개선에 호응해 나온다면, 남북한 간에 신뢰형성과 평화통일의 견고한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2. 동북아 안보정세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심화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세계 2위, 3위의 경제대국이 위치하고 있고, 한 · 중 · 일 3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총생산의 약 23%에 달하며 외환 보유고도 전 세계의 절반에 가깝다. 역내 국가 간의 무역 · 투자 · 교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적인 지역 경제통합 논의도 진행되는 등 높은 상호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이처럼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정치 · 안보 분야의 협력수준은 높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 즉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 역내의 도서 · 해양 영유권 갈등과 같은 역사와 영토의 문제는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같은 다자 간 지역협력체가 가동되고 있지만, 동북아의 경우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 이외에 안보분야의 정부 간 협의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제의하고, 역내 국가들이 논의하기 쉬운 연성이슈에서부터 협력의 관행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역 차원의 영향력 확대와 군비경쟁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천명하면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아태 지역을 중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태 지역의 안보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재정적자에 따른 국방예산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아태 지역에 해군전력의 60%를 배치하고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전력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추진하는 등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해 '신형대국관계' 형성을 표방하면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중국은 역내 위상 제고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강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예산 증액, 육군의 기동력 강화, 해 · 공군의 원거리 작전능력 확대 등 군사적 능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명분하에 미일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방위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해양 · 우주 · 사이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하여 무기와 군사장비의 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였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3년 '방위계

획대강'에서 채택한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에 기초하여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을 증강하고 도서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 이란 핵문제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에 개입하는 등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유라시아 경제연합' 창설, 크림반도 병합 등 구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군의 무기체계 현대화 계획에 따라 극동지역의 동부군관구와 태평양함대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2012년에 신설한 극동개발부를 중심으로 아태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에 적극성을 보이는 등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미중 관계가 동북아 안보질서의 핵심 변수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교차하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양국 간 협력과 경쟁이 지역안보의 핵심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역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증대된 국력을 바탕으로 정치 ·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역내 안보질서는 향후 이 지역에서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일 관계도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이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적극적 방위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러 양국이 전략적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미중은 역내의 안정과 평화라는 공통이익을 바탕으로 사안에 따라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틀 내에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중국의 부상을 환영하면서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 역시 미국과 신형대국 관계를 추구하면서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자 할 것이다. 다만, 양국관계의 전반적인 협력 기조 하에서도, 일부 사안에 있어 양국 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세계 안보정세

미국 우위 국제질서하에 지역강국 부상

미국의 우월적 지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국제질서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와 첨단 과학기술 및 우수한 문화적 자산 등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초강대국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군사개입에 대한 국내의 논란과 재정적 어려움이 국제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 정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여 년간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경우 국력신장에 부응하여 국제적 위상과 역할도 점차 커질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신형 대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세계 안보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의 통합과 외연확대를 위한 진로 모색, 러시아의 과거 영향력 회복 시도, 인도와 브라질의 지역 강국화 등으로 인해 주요 국가들 간에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고 국제질서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등 중견국의 비중과 역할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지분쟁 발생 가능성 상존

세계 각지에 영토, 종교, 인종 문제 등 뿌리 깊은 갈등 요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관련국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무력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 해양 분쟁,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갈등을 포함한 중동문제, 인도 · 파키스탄 영토 분쟁, 북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정,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 등으로 인한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영토와 해양관할권 갈등, 해상교통로 확보 경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확보를 둘러싼 마찰 등이 관련국들의 지정학적 이익이나 민족주의와 연계되어 무력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초국가적 위협 확산으로 인한 안보 불확실성 증대

오늘날은 전통적인 국가 간의 세력다툼이나 군사적 대결로 인한 안보 불안 외에 초국가적 위협의 확산에 따른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테러리즘은 최근 수년 간 중동, 서남아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정불안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테러리즘이 WMD 확산과 연계될 경우 국제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적, 자생적 테러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세계가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화 시대에는 사이버공격 위협도 심각한 안보문제이다. 경제, 학술, 군사, 문화 등 많은 분야로 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은 인류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성과 초국경성이라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범죄 · 공격 등 각종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제 구축은 물론 국가 간의 신뢰구축조치, 국제규범 마련 등 다양한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날로 그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는 해적, 마약밀매, 조직범죄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적극적인 공동대처가 요구된다. 지진, 쓰나미 등 대규모 자연재해, 원전사고나 환경오염과 같은 대형 재난사고, 신종 전염병과 물 부족 등도 안전문제를 넘어 넓은 의미의 안보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다양한 안보위협 요인 부각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상호의존성 증대로 인해 국가 간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마찰과 갈등의 소지도 많아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제분야이다. 지역별 · 국가별 불균형 확대, 한 국가의 금융 · 재정 위기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영향,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분쟁 등으로 인해 국제경제의 불안정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지구촌의 빈곤, 자원고갈, 테러리즘, 기후변화, 환경오염, 재해 등과 결합하여 더 큰 위험요소로 증폭됨으로써 개별 국가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지역분쟁, 외교적 갈등, 자원민족주의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자원과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셰일가스, 해양광물 등 신종 자원개발을 위한 경쟁, 희소 금속류에 대한 전략적 통제 강화,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등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어 미래의 안보위협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 차이, 국제사회의 규범 준수 여부, 상대국의 반정부 세력 지원 등으로 인해 국가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Ⅲ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1. 전방위 대북 군사대비태세 완비

2. 북한 WMD 위협 대응능력 확보

3.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4. 범국가적 안보역량 통합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군이 중심이 되어 모든 국가방위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우선 군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감히 도발할 수 없는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능력도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안보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국방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군장교 합동임관식 축사, '14.3.6)

Ⅲ.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1. 전방위 대북 군사대비태세 완비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 안보위협이다. 특히 WMD, 사이버전, 심리전, 테러전 등 북한의 비대칭전 수행 능력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의한 모든 종류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 나갈 것이다.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

우선 정부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긴밀한 정치 · 외교적 공조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것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앞으로도 양국은 공동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연합연습을 통해 포괄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굳건한 대북 억제 및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필요시 한미 동맹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다양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2010년 천안함에 대한 어뢰 공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은 GPS 교란, 사이버공격, 소형무인기 침투 등 새로운 수단과 방법으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군사적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도발 억제 · 대응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협력도 중요하다.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의지를 보여준다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임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계속 주지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인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북한 WMD 위협 대응능력 확보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WMD는 우리 안보에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다. 정부는 북한의 WMD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북한의 WMD 사용을 억제하고 만일 사용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나갈 것이다.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 및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등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 외교국방장관회담 등 주요 계기에 북한의 WMD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함으로써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공고히 해왔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반도 작전환경과 북한 지도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WMD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전략이다. 전시와 평시를 모두 상정하고 북한이 WMD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 정부는 또한 한미연합연습을 통해 확장억제와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능동적 억제전략 발전 및 대응능력 조기 확보

정부는 독자적인 대응능력 강화 차원에서 능동적 억제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능동적 억제전략은 핵 ·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도발에 대해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지도발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조치까지 포함한다.

한편 능동적 억제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의 핵 · 미사일을 '탐지-식별-결심-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 ·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발사된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북한의 생화학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정부는 북한의 생화학 위협에 대해서도 군사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사용을 사전에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에 대비하여 백신 · 치료제 개발 등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 은닉과 사용이 용이한 생화학무기를 활용한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국제사회의 WMD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

정부는 북한의 WMD가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확산방지구상'(PSI)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WMD 확산방지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다. 또한 핵테러리즘 방지와 핵안보 강화를 위한 '핵안보정상회의', 'G8 글로벌파트너십',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3.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북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잠재적 · 초국가적 위협에 대비한 능력과 방위역량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안보상황과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을 효율적이고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첨단기술 집약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독자적 대북 억제 및 대응 능력 향상

정부는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하여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북한군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첨단전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대북 우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전에 우리 군이 갖추어야 할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여 군의 전쟁수행 주도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장사정포, 특수전 부대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한 능력을 보강하고, 북한의 취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우리의 비대칭 전략을 개발하는 등 관련 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가용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군을 첨단기술 집약형 군대로 발전시키고 예비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예비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할 것이다.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대응태세 발전

정부는 불확실한 동북아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전략과 능력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전력증강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래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 · 장기 전력소요를 미리부터 계획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의 주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도발을 영토 밖에서 차단하고 격퇴하기 위해서 원거리 감시 · 정찰 · 타격 능력을 확충하고자 한다. 우주 공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우주 전력도 조기에 확보할 것이다.

초국가적 · 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 제고

정부는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한다. 우선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민 · 관 · 군 · 경 대응체제를 발전시킬 것이다. 마약, 인신매매, 해적 등 국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기여도 확대할 것이다. 대규모 자연재해와 재난, 국가기반시설 마비, 신종 전염병 확산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조기경보와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초국가적 · 비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방위산업 역량 강화

정부는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내 연구기관들의 국방 R&D를 활성화하여 우리의 군사적 필요와 기술적 역량에 부합하는 무기체계와 장비를 개발하고, 미래전을 주도할 핵심 ·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민군 기술협력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역량을 국방 연구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촉진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창조경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4. 범국가적 안보역량 통합

오늘날 다양한 유형의 위협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안보의 모든 요소들을 통합한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발전시키고 체계화시켜 나갈 것이다.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과 위기 대응능력 제고

정부는 국가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등 안보정책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위기관리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위기 상황별로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한다.

국가 차원의 총력전 수행태세 확립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전시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쟁의 수행과 지원에 필요한 각종 계획과 체계를 발전시키고, 정부 차원의 통합된 연습을 통해 실전에 대비한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다. 아울러 민 · 관 · 군 · 경 통합방위태세를 발전시켜 전쟁 발발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한다. 또한 유사시에 국가자원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국가동원태세도 확립할 것이다.

국가 정보역량 강화와 정보의 통합성 증진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합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안보환경과 정보소요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자산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할 것이다. 또한 정보 관계기관들 간의 융합체제를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정보의 통합성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협조체계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발전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대응체계를 발전시키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우선 사이버 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보강하여 대응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우방국들과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다각적인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Ⅳ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1.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2. 남북대화 추진과 합의이행 제도화
3. 인도적 문제 해결과 호혜적 교류협력 추진
4.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정착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13.2.25)

Ⅳ.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1.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북한의 핵개발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며, 동북아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정부는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 추진해 나가고,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북핵 불용' 원칙 견지

북한은 지난 20여 년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네바 기본합의', '9 · 19 공동성명' 등 많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지속해왔다. 더욱이 수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헌법에서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을 견지하면서, '실효적인 대북 압박'과 '원칙 있는 비핵화 대화'를 병행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압박'과 '대화' 병행 추진

정부는 우선 6자회담 참가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의 등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한 · 미 · 중 · 일 · 러 5자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 · 미 · 중 등 소다자협의를 활성화하여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핵안보정상회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RF 등 다자회의를 활용하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여 북한을 압박해 나갈 것이다. 정부 간 공식 채널 외에 민간 및 반민반관 협의채널도 적극 활용하여 해당 국가들과의 다차원적 소통을 강화하고, 민간 차원에서 북핵 불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공조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핵개발로 인한 이익보다 핵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북한 지도부가 전략적 결단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 결의 2094호 등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추가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양자 · 다자 차원의 대북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할 수 있는 대화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에 대해 먼저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양한 대화 재개 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 진전의 선순환 추구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북한 핵문제의 진전 없이 남북관계 발전만을 추구하거나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핵문제와 직접 연계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나 순수 사회문화교류 등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작은 문제에서부터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큰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대규모 협력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정치 · 경제 · 외교적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하고,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한다.

2. 남북대화 추진과 합의이행 제도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하는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남북대화 추진

정부는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 나간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 왔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철수와 잠정 중단 상황에서도 북한의 책임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끈질긴 협상을 통해 재가동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길을 열었다.

앞으로도 비정상적인 남북회담 관행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특히,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기회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분야별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평화통일구상' 에 대한 북한의 호응과 협력을 확보하고, 인도주의적 문제의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등 제반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당국 간 교섭과 제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상호 신뢰구축과 관계발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남북 간 합의이행 문화 정착

정부는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이는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과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북한을 상식과 국제사회 규범에 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견인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7 · 4 공동성명'을 비롯해서 '남북기본합의서', '6 · 15 공동선언', '10 · 4 선언' 등 남북 간의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자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 이행문제는 국민적 합의와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합의사항 실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3. 인도적 문제 해결과 호혜적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 · 국군포로 ·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이를 구체화한 드레스덴 평화통일구상에 따라 분야별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남북 간 신뢰를 축적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 납북자 문제 해결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이산가족 · 국군포로 · 납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사망하였으며, 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선 이산가족의 정례적인 상봉과 전면 생사확인, 영상편지 교환, 유전자정보를 보관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사회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군포로 · 납북자의 생사확인, 가족상봉 그리고 송환을 추진할 것이다. 국군포로 · 납북자와 그 가족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

북한인권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민족적 과제이다. 우선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북한인권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계속해서 참여하는 등 유엔의 북한인권 개선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설치되는 현장사무소 활동도 지원할 것이다. 또한 각종 양자 및 다자 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NGO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동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남북대화 재개 시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정책변화를 꾸준히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 추진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우선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통일세대인 북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나아가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전염성 질병의 예방 · 통제 등 보건의료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의 분배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상황을 확인하는 현장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 및 해외 NGO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할 것이다.

호혜적인 남북협력 추진

정부는 드레스덴 평화통일구상에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생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 제안의 기본 취지는 다양한 경제협력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농업 · 축산 ·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과 조림 및 산림병충해 방제 등 산림녹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원이 성공하면 신재생에너지 · 생태보전 등 친환경분야로 협력을 확대하여 '그린데탕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농수산물, 위탁가공 등 소규모 교역을 재개하고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를 허용하는 등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 간 신뢰가 구축되고 북한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력 · 교통 · 통신 등 인프라 확충, 특구개발 참여,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지원 등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정부는 나진 · 하산 물류사업 등 남 · 북 · 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 · 북 · 중 협력사업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이루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2013년 4월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 정부는 잘못된 행동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남북한은 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에 맞게 통행 · 통신 · 통관, 투자보호, 노무 · 세무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등을 통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국 간 상설 협의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해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개발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추가 입주, 투자 확대, 근로자 숙소 건설 및 통신환경과 통행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민간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남북한 주민 간의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역사 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 다방면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유적, 건축물, 기록물 등 역사 · 문화재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민족문화의 복원과 융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둘째, 겨레말큰사전 편찬, 예술공연 등 남북한 간 언어 ·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체육 · 청소년 및 종교 교류를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순수 민간 차원의 접촉과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정착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여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신뢰와 평화 · 협력의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그동안 남북한은 상호 불가침과 비방중지 등 기본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여러 차례 합의했지만, 북한의 약속위반과 군사적 도발로 인해 초보적인 신뢰조차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적절한 시점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하여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바탕 위에,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 간 협의를 추진할 것이다. 우선 천안함 ·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상호 비방과 도발 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 기존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다. 국군포로 송환과 공동 유해발굴사업을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도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NLL 무력화와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 한반도 긴장완화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남북한은 물론 유엔,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의 당사자들이 공원조성에 함께 참여한다면 상호 신뢰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원 조성을 위한 군사적 협력을 경제 · 환경 · 문화 등 다방면의 남북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에는 정부의 국정철학인 ‘신뢰’와 평화 · 협력의 정신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분쟁과 갈등 해소의 한국적 모델을 만들고 신뢰와 평화 · 협력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평화애호적인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

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생태 · 평화벨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V

통일시대 대비 실질적 통일 준비

1. 범국민적 통일 역량 강화
2. 통일교육 활성화
3. 평화통일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 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14.2.25)

V. 통일시대 대비 실질적 통일 준비

1. 범국민적 통일 역량 강화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국민적 통일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범국가적 통일준비기구를 가동하여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한 주민의 원활한 통합을 위한 분야별 준비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범국가적 통일준비체계 마련

정부는 단순히 하나의 영토, 하나의 체제를 실현하는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통일을 지향한다. 이와 같이 분단의 극복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진정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민간과 함께 지혜를 모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각 분야별로 통일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다양한 분야

의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통일과정의 청사진, 통일의 편익,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통일논의를 공론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다. 이를 통해 통일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지역 · 세대 간 차이를 해소하고 국론을 결집하며,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소속으로 범국가적인 통일준비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분야별 통합준비 강화

정부는 오랜 분단 기간을 거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질화된 남북한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 분야별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평화통일과 실질적 통합을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주민의 사회 · 심리 ·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연구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통일과 통합 과정을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통일준비를 내실화할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을 미리 양성하여 인적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통일에 대비한 전문인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함께 육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조기에 경제 ·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통일된 한반도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2. 통일교육 활성화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의지를 결집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 과제이다.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교육 과정과 내용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통일교육 추진체계 정비

통일은 민족의 오랜 염원이자 국가의 미래와 국민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적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회의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통일미래 세대인 청소년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통일교육 추진체계를 정비할 것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초 · 중 · 고교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일교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열린 통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 국책연구소, 민간 전문가, 일선교사 등과 통일교육 민관 거버넌스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은 물론 민간의 통일교육 기반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맞춤형 통일교육 확대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통일교육의 내용을 대상별로 다변화하여 전문지식과 정보는 물론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통일교육에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자연스럽게 통일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시민들도 통일교육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해외 학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재외동포 2 · 3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다.

3. 평화통일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국제사회와 한반도 통일의 비전 공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것은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불안의 핵심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촉진하고 세계평화와 다양한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인구 8천만의 역동적인 경제권으로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고,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의 허브로서 세계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전쟁과 핵의 공포에서 벗어난 통일한국은 다양한 국제문제 해결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정부는 통일된 한반도가 강화된 위상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보다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다.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심 관련국들과 정상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앞으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양자 및 다자 외교활동을 통해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 연방정부와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독일통일의 경험을 통일준비에 활용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유엔안보리와 각종 다자협의체 등 국제 외교무대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의 한반도 전문가, 유관기관, 재외동포 등과 민간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활성화하고, 재외공관과 문화원, 학술단체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갈 것이다.

VI

한미 전략동맹 발전과 국제적 안보협력 증진

1.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2.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3. 국제사회와의 포괄적 안보협력 증진

“저는 세 가지의 원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을 위한 미래의 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한미동맹은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향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중략) 둘째, 한미동맹은 역내 갈등과 대립을 떨쳐버리고 평화와 번영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동북아 협력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중략) 셋째, 한미동맹은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제공해 주는 지붕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사, ‘13.5.7)

Ⅵ. 한미 전략동맹 발전과 국제적 안보협력 증진

1.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한미동맹은 한국 방위를 위한 군사동맹의 역할을 굳건히 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동맹을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양자, 지역 그리고 범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한미 군사동맹 강화

우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외교국방장관회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MC) 등 다양한 정책협의체를 통해 안보정책을 조율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역내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 등 안보상황의 변화를 고려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우리 군의 능력을 강화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동맹의 협력 분야 확대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보호 등 양국이 지향하는 공동의 가치와 호혜적 이익에 기반하여 동맹의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미 양국은 협력의 영역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분야로 확대하면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양국 정상은 2009년 '한미동맹 공동비전'과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통해 동맹의 중 · 장기 비전과 발전방향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양국은 FTA를 충실히 이행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사이버안보, 우주공간의 활용,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앞으로 한미동맹은 한반도 방위를 넘어 지역과 범세계적 안보문제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테러리즘, WMD 확산, 해적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문제 해결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상호협력과 공동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2.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역내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북아 평화협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양자 차원에서 주변국들과 맞춤형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역내 다자안보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 안보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협력 심화

우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정치 · 안보분야에서는 북핵과 통일 문제 등 한반도의 핵심 사안들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 지도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증진하고, 포괄적 · 다층적인 전략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FTA 추진 등 양국 간 경제협력과 인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일본과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북한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은 우리 안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속해 나갈 것이다. 다만 한일관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

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기초로 한 양국관계 진전을 위해 대일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경제 · 사회 · 문화 · 지자체 ·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며 일본과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한일관계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용적 발전 모색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용적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정상 간 정례적인 상호방문과 고위급 정치 · 안보 대화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외교안보당국 간 협의채널을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남 · 북 · 러 3각 협력을 계기로 동북아와 유라시아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한러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도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다자협력을 통한 지역안보 문제의 공동 해결 추진

정부는 주변국들과 다자 차원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자관계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우선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 미 · 일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한 · 중 · 일 3국 협력체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한 · 중 · 일 FTA 체결 등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신뢰와 경제적 유대가 상호 보완적으로 3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한 · 미 · 중, 한 · 미 · 일 · 호 등 소다자 전략대화를 통해 아태 지역 국가 간 신뢰를 제고하고 안보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나갈 것이다.

3. 국제사회와의 포괄적 안보협력 증진

지역별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다자안보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안보문제 해결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와 전방위적으로 안보협력을 증진해 나가고자 한다.

지역별 안보협력 강화

아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호주, 인도, ASEAN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유럽, 북미, 유엔군 참전국과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우리의 대외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에서도 지역별 거점국가와 전략적 교류협력을 심화하면서 협력의 대상을 역내 인근 국가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지역별 · 국가별 특수성에 맞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산군수협력, 인적교류, 연합훈련 등 맞춤형 국방교류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 참여

정부는 다자안보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기반을 확충하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전략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SEAN+3, ARF 등 주요 다자협의체제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

이다. 또한 '서울안보대화'(SDD) 등 우리 주도의 다자안보협의체를 발전시킴으로써 다자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글로벌 안보문제 해결에 능동적 참여

정부는 글로벌 안보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다국적군평화활동, 국방협력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아울러 WMD 확산 방지라는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지키기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 등 관련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핵안보정상회의, PSI 등 국제레짐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VII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틀 마련

1.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적극 추진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협력 확대
3.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중견국 외교 전개

“미래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질서는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정치 · 안보 협력은 뒤쳐져 있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으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 테러 대응 등 연성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동북아 다자 간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미국 상 · 하원 합동 연설, ‘13.5.8)

Ⅶ.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틀 마련

1.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적극 추진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은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불신 구조를 화해와 지속가능한 협력의 구도로 전환하기 위한 신뢰외교의 주요 정책이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은 역내 국가들 간에 다자대화를 촉진하여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고 상호 신뢰를 높여 공고한 협력의 틀을 만든다는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의제의 점진적 확대

관련국들의 참여가 용이한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재난구호, 사이버 등 연성이슈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점차 협력의 관행을 쌓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정치 · 안보 분야의 경성이슈로 의제의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다.

기존 다자협의체 활용

새로운 다자협의체를 서둘러 만들기보다는 협력의 과정 자체를 중시하고, 역

내의 기존 다자협의체를 활용하면서 더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물론 협력의 틀이 존재하지 않는 미개척 분야의 경우에는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참여국 범위와 역할 확대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에서부터 시작하고, 점차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 국제기구에도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협력의 수준도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특정 국가가 모든 논의를 주도하기보다 협력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국가가 주인의식을 갖고 협력을 이끌어가도록 권장하고,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각 분야별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민관 협력 촉진

정부 간 협력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협력도 포함하는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 부족한 초국가적 안보문제는 NGO 등 민간 차원의 협력을 적극 촉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것이다.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협력 확대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거쳐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지역은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중요한 지역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거대한 신흥시장이기도 하다.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고자 한다.

단계적인 협력 확대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에 중점을 두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남 · 북 · 러, 남 · 북 · 중 3각 협력을 중심으로 협력의 분야와 지리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평화협력 그리고 유라시아의 번영을 연결시켜 나갈 것이다.

정부는 전략적,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면서 유라시아의 에너지, 철도, 해운, 물류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러시아의 극동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적 유사성이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청년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행사 공동 개최, 지식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우호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상생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한반도 · 동북아 협력과의 연계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는 경우,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연계하는 대규모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외연을 확대하고 역내 국가들 간의 신뢰구축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축적된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유라시아 대륙을 갈등과 대립을 넘어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바꿔 나가고자 한다.

3.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중견국 외교 전개

오늘날 강대국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중견국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우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주도함으로써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아울러 다른 중견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다.

세계평화와 인권증진

정부가 추진하는 중견국 외교의 첫 번째 영역은 세계평화와 인권증진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내실화하고, 주요 국제분쟁의 해결과 국제 인권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아울러 핵안보, 사이버안보, 테러리즘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개발협력 외교

정부는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원받는 나라의 실질적인 필요와 국제규범을 고려하면서 모범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원조를 받는 나라에게 우리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독창적인 기여를 모색할 것이다. 또한 개발협력에 관련된 글로벌 의제 형성에도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이다.

중견국 네트워크 확대

정부는 중견국 외교를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먼저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및 호주와 결성한 비공식 협의체인 '믹타'(MIKTA)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MIKTA를 통한 협력이 성공적으로 제도화되면 추가적으로 다른 중견국 협력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반관반민 또는 민간 차원의 보완적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동북아 평화 ·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Ⅷ

국가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

1. 경제부흥을 선도하는 경제외교 추진
2. 상생과 호혜의 지역별 맞춤형 외교 전개
3. 국민 안전 · 권익 증진과 공공외교 강화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의 소중함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발전과 성취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인류의 공동번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엔군 참전 · 정전 60주년 기념사, ‘13.7.27)

Ⅷ. 국가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

1. 경제부흥을 선도하는 경제외교 추진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외교가 중요하다. 양자 · 다자 경제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투자유치, 시장개척 그리고 우호적인 대외경제 여건 조성에 주력해 나가고자 한다.

지역별로 특성화된 다각적인 경제협력 추진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EU, ASEAN 등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들과 경제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 선도국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신흥국들과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활동의 외연을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

갈 것이다. 아울러 중동과 중남미 지역의 자원부국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힘쓰고, 이들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국제 경제외교 강화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외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규모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유망사업 분야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에서 보다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등 법적인 안전장치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미국, EU, ASEAN, 인도 등과의 기존 FTA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최근 체결된 캐나다 · 호주와의 FTA가 조기에 발효되도록 하고,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세계 경제 · 환경 협력에 적극 참여

정부는 범세계적인 경제 ·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세계경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WTO), 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규범 형성 과정에 참여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을 목표로 한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새로운 'Post-2020' 기후변화레짐을 형성하는 데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아울러 유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에 활발히 참여하고, 우리 주도로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녹색성장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2. 상생과 호혜의 지역별 맞춤형 외교 전개

세계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외교를 다층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상대국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상생과 호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유럽 · 중앙아 지역 외교

단일 경제체로는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인 EU는 우리나라와 정치 · 경제적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큰 중요한 파트너이다. 또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우리와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며 국제사회의 규범형성과 여론조성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출발지인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협력해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역내의 다른 나라들과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여 호혜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EU와는 2013년에 합의한 '미래형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개발협력, 위기관리 등 폭넓은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석유, 가스, 석탄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약 30여만 명의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어 정서 · 문화적으로도 우리와 높은 유대감을 가진 지역이다. 정부는 중앙

아시아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핵심지역으로 간주하고 상생과 협력의 외교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설 ·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산림,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아시아의 경제 · 사회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한 · 중앙아협력포럼' 개최와 협력사무국 설립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동남아 · 서남아 지역 외교

ASEAN은 동남아 지역의 안보와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과 FTA를 기반으로 ASEAN 국가들과의 정치 · 경제적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동시에 2013년 10월 한 · ASEAN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ASEAN과의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의 범위를 사회 ·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메콩강 유역 5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분야별 ASEAN 공동체 출범을 지원함으로써, ASEAN 차원의 통합 강화 노력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ASEAN과의 협력기반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서남아 지역은 16억의 거대한 인구와 약 2.2조 달러의 경제규모를 갖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정부는 역내 강국인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서남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과 한 · SAARC 외교장관회의 등 협의체를 활용하여 남아시아와의 협력을 보다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자 자원개발과 창조경제 분야에서 유망한 협력국가들이다. 정부는 양국과의 다층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한 · 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와 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간의 정례 협의채널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태평양도서국가포럼'(PIF)과의 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 도서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외교의 외연을 넓혀 나갈 것이다.

아프리카 · 중동 지역 외교

아프리카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풍부한 자원, 인구 성장에 따른 중산층 증가 등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정치적 분열과 내전으로 인해 정세 불안정이 지속되는 지역이다. 중동은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공급원이자 주요 해외건설사업 진출시장이다.

정부는 아프리카 · 중동 국가들과 에너지 · 자원 개발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재생에너지 등 여타 분야로 협력을 다각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우리의 경험을 이 지역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역내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걸프국가와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주변 중동국가와의 양자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등 대중동외교의 외연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특히 '걸프협력이사회'(GCC), '아랍연맹'(League of Arab), '아프리카연합'(AU) 등 지역기구와 정치 · 경제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중남미 지역 외교

중남미 지역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신흥시장으로서 역내 통합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역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에너지 · 자원 협력을 비롯하여, 인프라, 농업, 보건, 정보통신, 전자정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등 중남미 지역협의체들과 대화채널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확대하며, 지역 간 협력체인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3. 국민 안전 · 권익 증진과 공공외교 강화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사서비스 제공에 힘쓰는 한편, 재외동포와 연대를 강화하고 호혜적인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국민참여형 공공외교를 통해 국가 이미지와 소프트 파워 증진에 주력하고자 한다.

국민 안전 · 권익 증진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빈도가 계속 증가하여 2013년을 기준으로 연간 출국자는 약 1,500만 명이고, 장기 해외 체류자도 260만여 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 · 사고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행경보제도와 같은 예방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현재 운용 중인 영사콜센터와 신속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유사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 특히 비자면제협정 등 다양한 영사분야 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것이다.

170여 개 나라에 거주하는 700만 재외동포는 각 지역에서 많은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내면서 우리 민족의 근면함과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는 재외동포사회의 역량과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재외동포들이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공공외교 강화

오늘날 외교의 특징은 가치, 문화, 제도 등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세계가 신뢰하는 매력한국'이란 기치하에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공공외교에 주력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전 세계 178개 재외공관을 주요 거점으로 삼고 해당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공공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현지 사정에 밝은 재외공관이 그 지역의 관습과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외교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의 우수한 국제화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를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민간의 풍부한 해외경험과 참신한 아이디

어를 활용하기 위해 창의적인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외교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외국인들의 폭넓은 공감대와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부록 : 약어정리

-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ARF(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지역안보포럼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AU(African Union) 아프리카연합
- CELAC(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States)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국가공동체
-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 EAS(East Asia Summit) 동아시아정상회의
- EDPC(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확장억제정책위원회
-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 FEALAC(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
-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이사회
-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 GICNT(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세계핵테러방지구상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 ICRC(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위원회

-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 MC(Military Committee) 한미군사위원회
- MIKTA(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믹타
-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무기확산금지조약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 PIF(Pacific Islands Forum) 태평양도서국가포럼
- PKO(Peace Keeping Operation) 유엔평화유지활동
-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확산방지구상
-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 SDD(Seoul Defense Dialogue) 서울안보대화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대한민국
청 와 대

발간등록번호
12-1025000-000001-01